

제439회 국회
(정기회)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10월14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상정된 안건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1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1

(09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임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신규 회부된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결의안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09시02분)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

원님들의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경위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은 9월 30일 날 발의되어 10월 1일 날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은 10월 2일 발의되어 10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결의안은 지난 10월 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당일 바로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지난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9월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거쳐서 결의안 2건이 발의된 이후인 10월 5일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북한이 MDL 이남지역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고 북한의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피해 장병들에 대한 사과와 지뢰의 즉각적인 제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다음으로 결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은 총 6개의 장, 6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고 지뢰 폭발사고 대응 과정 등에서의 증거 보전 및 자료 훼손 금지, 25년 9월 지뢰매설 식별 이후의 조치경과 확인, 진상조사 및 청문회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안은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MDL 이남지역에 설치된 북한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대북 규탄과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있고 부상 장병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향후 작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엔군사령부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부상 장병의 치료·회복 및 예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국제적·외교적 조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DMZ 작전을 개시하는 경우에 장병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보시면, 나경원 의원안은 지뢰 폭발사고 관련 진상규명 및 상응조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보시면 지뢰 폭발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제5장에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제6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진성준 의원안은 지뢰 폭발사고 관련된 북한군 규탄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4페이지, 5페이지에는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은 2개의 안인데 지금 2개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성준 위원장님 안을 가지고 거기에 공통분모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것과 공통된 분야,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3쪽에 보면 2번 공통적인 결의안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제1장 5항 부상 장병 치료·회복 지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제3장에 대한 국제적·외교적 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 그다음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장비 안전대책 마련, 그런 사항들을 진성준 안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토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개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국방위에서 했던 것은 사실 당을 떠나서 사과 요구, 재발방지, 규탄 그리고 장병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 국제적인 공조·비난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이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진성준 위원장이 발의했다기보다 여기 내용도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토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장 임종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두 안의 상당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도 많은데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안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사실 더 늦추기 힘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성준 의원님 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나경원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예, 알겠습니다.

또……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지요.

이게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한 폭발사고로 우리가 조사 결론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첫째,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책임 추궁에 대한 규탄 그게 내용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보존이라든지 절차의 문제는 우리 국내적인 조치니까 그것은…… 장병에 대한 지원 이것도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유엔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한, 그것은 아마 유엔사하고 국방부에 대한 조치겠지요? 그 정도로 내용 넣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촉구 이 정도로 내용 들어가면…… 진성준 위원장 안으로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김성희 위원님, 한말씀하시……

○김성희 위원 아니, 같은 생각이라서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2개의 결의안이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된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이 볼륨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해서 첨삭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경원 의원의 안이 볼륨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난 9월 21일 사건, 그러니까 폭파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지속되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빨리 개최해서 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2015년 안도 직접 보고 그다음 진성준 안을 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 놓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하고도 상의를 죽 하면서 이게 따로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병합 심의를 하자는 데 동의를 끌어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진성준 안에다가 일부를 첨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성준 의원안 자체도 9월 21일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국방부·합참이 밝힌 내용들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성준 안을 중심으로 나경원 안의 일부 내용,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첨삭을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오늘 소위를 빨리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만 분배해 주세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복사하는 대로 나눠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씩 나눠 주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죽 한번 읽어 보시고 한 분씩 첨삭에 관련된 의견들을 주시

면……

○**김병주 위원** 몇 개 더 복사해서 뒤의 보좌진도 주세요.

○**소위원장 임종득** 보좌진들도 주세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민홍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의한 겁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요.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지금 전부 다 동의하는데 여기 3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4항을 말하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3쪽에, 일단 거기 3항에 보면 빨간 줄로 적은 거 있잖아요, ‘도발을 방지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군이 지연한 거는 알다시피 우리가 이틀 동안은 병사들, 다친 병사들이 입원해 있었고 바로 준비를 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 4항 전체에는 저는 삭제를 원합니다. 이걸 추가한 것 같은데 이 2개만 한다면 나머지 분야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분야는, 국민의힘에서 수정한 사항은. 그래서 3항은 진성준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4항은 그냥 여기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됐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결렬이 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그런 것까지 군이 국방위에서 하는 거에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동일합니다.

나머지 도발은 저희들이 군에서도 도발로 했고 우리도 도발로 했기 때문에 다 도발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주문 앞에 네 번째 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분노하며 우리의 부상 장병과 그 가족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게 아까 나경원 의원안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넣어 주면 부상 장병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 워딩을 좀 잘해 주세요.

○**민홍철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3페이지 맨 위에 조사를 지연한 거는 사실은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다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전체 문단은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한 이런 문제가 있고 자위권 차원에 상응. 자위권 행사는 미리 국회에 보고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해 놓고 사후에 보고하는 건데 이것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걸 좀……

그래서 이 내용과 2번의 내용과는 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이런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언급을 어디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임종득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조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문이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연시킨 의혹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서 뭐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항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당에서는 나서 주고 계시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약하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의 대책을 사전에 비공개로 엠바고를 전제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은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김성희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김성희 위원 저는 인도적 차원에 대해서 어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짧게만 하면 목함지뢰 사건 때도 그때는 사실 북한이 와서 지뢰를 매설한 것이 그것도 우리 영토에 매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8월 10일부터 저희가 대북방송 재개를 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DMZ 평화공원 조성 얘기를 8·15 때 또 해서 온화한 측면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생각한 거지요. 공격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8월 25일에 아시는 것처럼 두 플러스 두 고위급회담을 끌어내서 거기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정부의 입장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어느 대목에서 애매하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장에 가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에 지뢰 심은 것 갖고 웬 자작극이냐고 하는 중에 저희가 해당 지역에 대한 폭파까지 감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작전까지 펼치면서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경한 대응을 했고 통일부 얘기를 자꾸 하시지만 그건 어제 또 설명드린 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00억 원을 투자해서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안까지 만들었던 전례들을 생각하면 국민의힘 정부 때 했던 일을 왜 민주당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한 손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화해의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격의 무기를 들고 양쪽으로 놓고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무슨 지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실제로 북한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카드를 정부가 들고 있는 것도 없애는 것을 국방위원회에서 꼭 결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4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 봤는데 저도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쪽에 지금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상 장병에 관련되는 언급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견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3쪽에 조사 지연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생각이고 주장인 것이고요. 사실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완전히 들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사실 DMZ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 합조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OP에서 그냥 해 가지고 결과 보고하고 그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빠졌다는 의혹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사고가 났는데 지금 피해 장병들 조치 때문에 이틀 늦었다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그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피해가 나면 당연히 그 시스템들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어느 군을 막론하고라도 사고가 났을 때 당일 그 대책 TF가 구성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중간 발표하는 거 보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 후에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단순히 25사단 지뢰 폭발만의 문제만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 저 북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쪽 불모지 작업하고 각종 진지 구축하고 무기체계 배치시키고 하면서 쪽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25년도로 오면서 MDL을 넘는 상황들이 부쩍 늘어나고 또 지뢰도 많이 심고 있는 부분들을 식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군이.

그래서 결국 MDL 이남에 지뢰가 묻혀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의 장병들이 다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1군단 빈충 경계 사건 때문에 이슈가 돼 가지고 전군에, 전방 군단 지역에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빈충 경계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계시켜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보는 건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를 다 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북한의 도발을 지금 여야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장관도 저희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발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김민석 대표도 도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발을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뭐지요? 북한의 도발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같이 합의가 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 군에 촉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MDL을 넘나드는 것을, 자기 안방 넘나들듯이 넘나들고 있는 북한을 계속 그대로 보고 우리 지역에 설치한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그걸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 북한의 행동이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탄 성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전방 지역에 또 MDL을 넘어서 가지고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일어나요. 왜냐? 지금의 우리가 하는 조치를 가지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소위 요새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넣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께서 어제든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과 다른 정부부처와 국방부의 대응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대통령님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대통령님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훨씬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합참이 하고 있는 대응이 과연 단호한 대응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위권 차원에서의 상응. 그러면 북한이 우리 MDL을 넘나들고 있고 지뢰를 매설했고 거기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장병이 다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뢰 몇 발을 폭파한 것이 사상 처음 있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그걸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북한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가 혼나겠구나. 그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대북 지원 재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게 대통령 그다음 다른 부처, 국방부가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 약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이건 안 된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이것까지도 이거는 재검토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레버리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는 겁니다. 넣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대통령님을 위한다면 군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북한이 움찔할 정도의 단호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걸 대통령님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컨트롤하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돼요.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정신교육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제가 정신교육 하는 게 아니고……

- 김병주 위원 아니요, 지금 의견만 얘기를 하시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 김병주 위원 저는 지금 느낌이 정신교육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 김병주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 대한 의견만 내시고요.
- 소위원장 임종득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번호를 짚어 가면서 국민이……
-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 느낌이 정신교육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지휘관한테 참모들 정신교육 받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아니지요.
- 유용원 위원 좀 들어 보시지요. 들어 보세요.
- 민홍철 위원 마지막 결론……
-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제가 지금 과하게 했습니까?
-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시지요, 마지막.
-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니까 제가 과하게 했어요?
- 김병주 위원 결론을 내고 그냥 여기에 집중하시지요.
- 민홍철 위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오, 저희들도 얘기할 게 있으니까.
- 김병주 위원 마무리하시고요.
-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참다참다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느낌은 제가 정신교육 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저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제 느낌은…… 제가 각각의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제 생각을, 우리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제가 대변하고 있듯이…… 저 절대 과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과하게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뭘 정신교육을……
- 김병주 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지요.
- 소위원장 임종득 내가 위원님한테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 김병주 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지.
- 소위원장 임종득 그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 민홍철 위원 자, 결론 내시고요.
- 김병주 위원 아니, 여기 정신교육 받으러 온 것 아니니까……
-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제가 정신교육 하고 있어요, 지금?
- 김병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다니깐요. 내 느낌은 내 자유지.
- 소위원장 임종득 그런데 왜 끼어들어서 내 발언까지 막아요?
- 김병주 위원 좀 빨리 끝냅시다, 빨리.
- 민홍철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도 얘기를 좀 할게요.
- 소위원장 임종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선이고 후배라고 하더라도 위원

장으로서 할 때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간사를 하시면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

○**김병주 위원** 아니, 존중했잖아요. 빨리빨리 끝냅시다.

○**소위원장 임종득** 존중한 게 이겁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빨리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서로 다 아는 내용인데. 받을 것 같으면 받고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받고 끝냅시다, 이것. 뭘 장황하게 다 아는 얘기를 정신 교육 하듯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것 다 아는 거잖아요, 뻔하게.

○**민홍철 위원** 잠깐만요.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종득** 예, 민홍철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민홍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잘, 저도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3항에 있어서 후단,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확정적인 문장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도발을 방기했느냐 이걸 먼저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지연시킨 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확정 내용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 어떤 행위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 규탄 결의안에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아마, 대북한 규탄 결의안인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넣는 게 좀 부적절하다, 다른 차원에서의 조사 이런 것은 모르지만.

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국힘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별도의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전체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대북 지원 이것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도발에 대한 응징을 할 수는 있지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전쟁 때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또 하고.

그래서 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지뢰 폭발 도발 사고와는,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넣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뒤에 있잖아요, 그 앞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하고 단호한 대응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걸 좀 녹여 내서 5항의 맨 후단에다가 ‘군사적 도발 억제에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와 함께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넣으면 다 녹아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민홍철 위원님께서 4항과 관련된 부분의 대북 지원 재검토는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워딩을 남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 부분에 대한 의지는 최소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4항을 그냥, 대북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민

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민홍철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 이걸 워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살리고, 4항·5항을 합쳐 가지고 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냥 5항을 그대로 살리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데……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그래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함수를 이렇게 많이…… 향후의 조치니까 5항에다가 그냥……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대안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하시는 데 기술적인 방법이니깐요.

○**소위원장 임종득** 군사적 조치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조치를 좀 구분해 보고싶기도 해요.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러면 4항에서 앞부분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이라는 것은 좀…… 그러면 우리가 상응이라 할 때는 똑같이 지뢰를 북한에 가서 심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조치는 꼭 비례성이 아니라니까 ‘자위권 차원의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 정도 넣으면 그 정도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정도의, 별도 항으로 하든…… 저는 더 좋은 것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처럼 굳이 항을 만드는 것보다 5번 항에 그런 것들을 넣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좋습니다. 지금 민홍철 위원님 안하고 거의 비슷한 걸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유용원 위원** 대북 지원 재검토 부분의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민감하시고. 그래서 ‘인도적 지원’ 부분을 빼고 그냥 ‘대북 지원의 재검토’ 정도를 언급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제가 발언……

○**소위원장 임종득**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저는 이것은 2015년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바로 다음 줄에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유화책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안의 내용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통일부의 모든 관련된 예산을 깎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나가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밖에 없다. 너희들하고 대화는 없다’라고 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특정해서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은 대응인 거고 또 한 측면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관심사가 솔직한 얘기

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솔직히 북한도 그런 눈치를 봐서 그런지 이번의 지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나 자작극이니 비난하면서 유엔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 전체 전략적으로…… 위원장님도 안보실 차장도 하시고 전략을 오래 하시고 유용원 위원님도 이렇게 했지만 국가라는 것이 꼭 군사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이 되든 지원 재검토 이것은 국방위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옥죄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단호하게 군사적으로 더 보복하고 싶지만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솔직히 톱 까놓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사되길 원하는 면도 있고 군사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 관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대응을 강하게 하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을 외교적인 조치를 하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앞으로 미래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줄여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는 국방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사실은 대북 규탄, 사과, 재발 방지가 제일 포커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임종득 민 위원님.

○민홍철 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대북 지원은 사실 유엔에서도 제재가 돼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세계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넣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국가적인 전략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실 인도적 지원도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검토 부분들이 있고 또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군사적 대응 자체가 단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호함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용원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북 지원 재검토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이걸 고집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세 분이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유용원 위원 예, 그렇시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4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것은 워딩을 살리겠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 정리가 안 된 게 3항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수준으로 정리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유용원 위원 제가……

○소위원장 임종득 예, 말씀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이 명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에 ‘또한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을 ‘이번 도발 사건의’로, 그러니까 ‘이번 도발 사건의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임종득 위원님들 의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의견을 좀……

○김병주 위원 이것은 좀 빠시지요. 사실은 군이 지연……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사, 유엔사와 같이 조사를 하는 거고. 솔직히 MDL 안에서의 조사는 주 책임이 유엔사에 있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사 들어갈 때도,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들어간 거지 우리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군사분계선 밖의 민통선이라든가 우리 군부대였으면 신속히 저 밑에서 검열단이든 보내서 바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엔사와 같이 해야 되는 구역이고 여기는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엔사하고 다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이 지연했다는 걸, 단정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예, 다시 말씀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엔사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도발 방지, 조사 지연 부분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이번 도발 사건의 군에 대해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로 표현이 바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군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야당 위원이지만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군의 조치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고 의혹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방위가 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포괄적인,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은 저는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핵심이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지뢰 폭발 사고도 사고지만 그 사고가 나는 과정속에서의 북한의 MDL 이남으로의 어떤 활동들, 지뢰 매설 그다음에 이게 빈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진상 규명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확인됐을 때 그러면 군은 얼마나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까지도 들고 나와서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들어냈지 않습니까? 냈다라면 최소한 여기 3항에서 도발 방지와 어떤 조사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련된 부분들의 언급은 워딩을 완화하더라도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하면 논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은 이 앞의 문구는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 군에 철저히 대비태세 확고히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 DMZ 일대에서 면밀한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생명 보호 이런 대책을 하라는 거고. 군의 요구는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 결의안의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자꾸 군의 대응 조치 이것은 국정조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정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든 이것은 별도 챗터인데 정 하고 싶다면 굳이 결의안에다가 이걸 넣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사실.

그래서 군에 요구하는 것, 이런 게 터지면 대비태세 확고히 하라는 것하고 DMZ 작전할 때 장병의 안전을 강하게 대책하라는 것이 군의 요구로 결의문에 맞는 거고. 군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진상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정조사 과정이든 당차원에서 필요하면 감사원 요구를 하든 조사를 요구하는 거지 결의안하고는 전혀 다른 챗터인데 여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국정감사 계속하니깐 그럴 때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에 대해 하시고요.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국정감사에서든 마찬가지로 규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규탄도 할 필요 없겠네.

○**김병주 위원** 아니요, 규탄하고는 그건 성질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자꾸 정부 조치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이것도 사실 진상조사한다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지요.

○**김병주 위원** 아니요. 규탄 결의안과는……

○**소위원장 임종득**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 도발 규탄 결의안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족을 넣다 보면 이상한 그림이 돼 버리는 거지요.

○**민홍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충분히 국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 대당의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규탄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넣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국정조사라든지 좀 더 추가 확인의 과정을 하려면, 국정조사도 당과 당이 합의돼

야 되니까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사하겠다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그걸 정부에 요구하는 거지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협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북한 결의안인데……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여기의 워딩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민홍철 위원 그것은 여전히 남겨 놓고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여기의 워딩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민홍철 위원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정도로만……

어떤 워딩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김병주 위원 앞의 3항 그대로 하면 되지요.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로 끝내면 되는 거지요.

○민홍철 위원 하여튼 뭔가 넣으시려면…… 아까 유용원 위원님 워딩 다시……

○유용원 위원 저는 추상적으로 ‘이번 도발 사건의 군에 대한 책임’ 이 정도로……

○소위원장 임종득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보세요. 지금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북한한테 ‘너 잘못했어, 규탄한다’ 이걸로 끝내는 것 자체가……

○김병주 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못 한 게 문제지요. 그거라도 해야지. 이것을 넣으면 더 이상 진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알다시피.

○민홍철 위원 군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김병주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촉구한다로 끝내야지.

앞에 큰 그것들이, 도발로 다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 앞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원안대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소위원장 임종득 이 자체를, 유용원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적 정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워딩을 가져온 거고요, 이게 제 워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원하는 것 다 들어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워딩 자체를 좀 완화를 시키더라도 어떤 형태로 가든 여기는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김병주 위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촉구한다로 했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항을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받아 주고 있는데……

○김병주 위원 그리고 4항에 군의 자위권 차원의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종득 그것은 워딩이 다른 거예요. 3항하고 4항은 워딩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지금 이 결의안도 사실 예전 결의안 수준으로 다 한 거잖아요. 예전에 해 왔던 걸 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한 거니까, 이것 빼면 옛날 수준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시간도 이제 다 됐는데.

○소위원장 임종득 이것 국회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국방위 차원에서의 단호한 조치들

을 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소한 것도 국방위 차원에서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국방 차원에 있어서의 이슈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장병들의 경계에 대한 어떤 심리 이완, 눈치 보기 그다음에 단호한 대응을 생각도 못 하는 이 부분들에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사실은.

○**김병주 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하니까 그때 계속 주시고요. 규탄 결의안에는 그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토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서 안 되는 걸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요?

○**김병주 위원** 아니, 안 되면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병기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잘못 알아 가지고……

○**소위원장 임종득** 김병기 위원님 오셨네요.

한 말씀 하십시오.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데 지금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아니요.

김병기 위원님,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고요.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김병주 위원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새로 오신 김병기 위원한테 지금 발언권을 주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 아니,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제가 지금 김병주 위원한테 발언권을 줬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지금 오셔서 발언권을 주는데 그 발언권을 중간에서 나서서 막는 것은 뭐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배경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 거지.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그걸 김병주 위원이 배경 설명을 합니까?

○**김병주 위원** 할 수 있지요. 왜 못 해요?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요.

○**김병주 위원** 소위 위원으로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김병기 위원** 발언권을 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새로 오서 가지고 발언권을 드렸어요. 드리는데 막아서면서 설명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오자마자 앉으셔서……

○**소위원장 임종득** 그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소위원장 임종득** 아니, 지금 회의하면서 위원 발언을 제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경 설명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진짜.

○**김병기 위원** 이 모든 사태가 제가 늦게 온 거기 때문에 먼저 사과드리고요. 시간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제가 이것 보고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면 발언 기회를 얻어 가지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기 위원님, 지금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는 합의가 됐고요. 3항 한번 보시지요. 지금 진성준 위원장님 안을 기초로 수정, 나경원 의원안을 좀 보완하는 안인데 3항에서 마지막 항, 빨간 걸로 쓴 것은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DMZ 도발을 방지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실 조사를 지연시킨 이런 사실이 아니고 이걸 단정적으로 하고 군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한다는 것은 국정조사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병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걸 참고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지금 10시에 전체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합의 안 되면 그냥 전체회의에서 토의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임종득** 그렇게 합시다.

○**민홍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임종득** 이야기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이게 우리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이렇게 제목은 합의를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예, 그것은 다 된 거지요.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규탄 결의안 속에 북한의 책임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아까 그 3항, 우리 그런 과정 속에서 이 3항 마지막 후단은 우리 군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묻기는 이게 안 맞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 국방위원회나 국힘에서 요구하시는 국정조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규탄 결의안 속에는 넣기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 모양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3항 이것 외에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3항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없으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지요. 표결로 하시지요, 여기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을 냅시다. 다수결 표결을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소위원장 임종득** 지금까지 김병주 위원이 국방위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표결한 적 있어요?

○**김병주 위원** 없지요. 규탄 결의 이런 건 당연히……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서 지금 다수결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김병주 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 그냥 여기서 끝내고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위원장님, 이것 찬반 표결로 하시지요, 이 3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딱 되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표결 못 하겠는데.

○**김병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 그만두시고 대리로 임명해서 하시면 되지.

○**소위원장 임종득** 누구 마음대로 그만뒤요? 누가 그만뒤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김병주 위원** 표결로 하시자니까요?

○**유용원 위원** 마지막 한 문구가 지금 합의가 안 된 건데 안타깝지만 소위에서 김 위원님 말씀, 표결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체회의로 넘기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전체회의 넘겨 가지고 우리도 할 이야기 하자. 그렇게 합시다.

○**민홍철 위원** 그리하시지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2건의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결의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3항과 관련돼서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결의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병기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유용원 임종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